

美 PTP 일부 종목 과세유예... 증권사 “서학개미 매수 금지”

미국 국세청(IRA)이 올해부터 PTP (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 중 일부 종목들의 과세가 유예된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신규 매수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PTP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마스터합자회사(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등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 파이프라인, 일부 부동산 관련 종목이다. 파트너십 형태로 상장돼 거래되는 종목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200여개 종목은 변동이 가능하다.

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PTP 종목 중 41개 종목이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동안 과세 면제 대상에 올랐다. 다만, 과세 면제 종목의 경우 추가되거나 변동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세금 10% 원천징수
41개 종목 92일동안 과세 면제
증권사 잇단 신규매수 제한 조치
전문가들, 대체상품 주목 조언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일부터 PTP 종목의 신규 매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뒤이어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신규 매수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종목의 과세가 유예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종목이 변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PTP 종목을 편입한 일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은 과세 리스크를 면하게 됐다.

현재 ▲KODEX 3대농산물선물 ▲WTI원유선물 ▲TIGER 농산물선물 ▲TIGER 원유선물 등이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미국 IRA로부터 PTP

방식으로 설정된 펀드의 수익과 영업 활동 등을 입증하면 과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PTP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며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모두 원천 징수 제외 대상으로,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체 상품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 대체 종목들이 충분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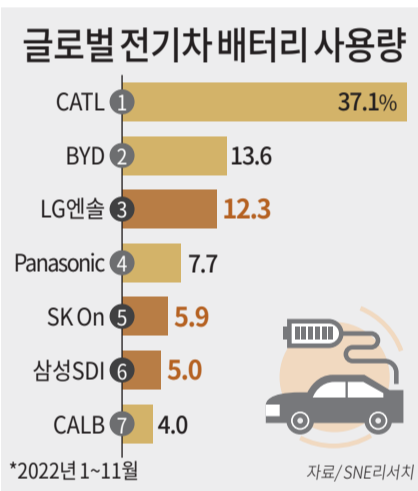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한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천연자원, 변동성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PTP 종목의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PTP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K-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하락... 中 기업 성장 두드러져

지난해 11월까지 전세계 사용량
국내 3사, 점유율 30.5%→23.1%
LG엔솔, BYD에 2위 자리 내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배터리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중국 BYD에 내주는 등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이 두드러졌다.

4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446.0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74.7% 증가했다.

특히 중국계 배터리업체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중국 CATL은 글로벌 점

유율 37.1%를 기록하며 1위를 굳건히 지켰고, BYD는 지난달 13.2%이었던 글로벌 점유율을 이달 13.6%로 확대하며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 12.3%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3사 역시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글로벌 점유율은 30.5%에서 23.1%로 전년 동기 대비 7.4%포인트(p)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54.8GWh를 기록한 반면, 점유율은 13.8%에서 12.3%로 줄었다.

SK온은 전년 동기 대비 72% 확대된

26.1GWh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점유율 5.9%, 5위 차지했다. 삼성SDI는 22.1GWh를 판매하며 74.9%의 성장률을 보였고, 점유율은 5%로 6위를 유지했다.

이밖에도 일본의 파나소닉은 판매량 34.1GWh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했다. 점유율은 7.7%로 4위에 머물렀다.

SNE리서치는 경기침체, 수급난 등의 악재 속에 유럽형 폭스바겐, 볼보 등의 모델과 중국형 테슬라 모델에 중국계 배터리 탑재 비중이 높아진 것을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전 세계 전기

차 대수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시작했다”며 “미국,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완전 폐지하기로 하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보조금 정책 완전 폐지는 완성차업체들이 차량 경쟁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 확보와 완성차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57.2GWh로 작년 동월의 1.7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중국 시장은 1.9배로 성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재건축 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비중 50%→30%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주거환경·설비노후는 30%로 상향



재건축 사업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뉴스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반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계에 대한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韓 유망 스타트업, 美 CES서 기술 뽐낸다

중기부, ‘K-스타트업관’ 운영
투자자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

대한민국 유망 스타트업들이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기술력을 뽐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2023’에 개막 첫 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K-스타트업(KSTARTUP)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CES 유레카 파크관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와 협력해 선정한 창업기업 51개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창업기업 데모데이 개최, 기업·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돕는다. 시는 통역, 홍보와 관람객 안내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현지 투자자 네트워킹 발굴을 지원한다.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은 데모데이, 글로벌 미디어 인터뷰, 비즈매칭 등

참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투자자·바이어와 현장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CES에 참가한 글로벌 대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알려 K-스타트업이 가장 강력한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로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시회 첫째날부터 CES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혁신기업 데모데이 참관 등 디지털·딥테크 벤처·창업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6일에는 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등과 만나 글로벌 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한인 투자자와 간담회도 연다.

앞서 CES는 올해 주목해야 할 기술 분야로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운송·이동성 ▲디지털 헬스 ▲웹 3.0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를 꼽았다.

CES에는 올해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참여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참여할 전망이다.

/김승훈 기자 bada@